사설

소통간담회, 실천 뒤따라야 완성된다

양캠에서 열리는 소통간담회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다. 학기마다 한 차례, 학생 대표와 교직원, 관련부서 부서장과 부총장단이 공식적으로 마주해 학내 현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학생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학교가 이를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간담회가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안건에 여전히 같은 답변이 몇 단어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매 학기 소통간담회에 취재를 갈 때마다, 캠퍼스 내 시설 개선, 교육 여건 향상 등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문제들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늘 그렇듯 "검토 중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당장 어렵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뿐이었다.

특히 구한의대 명칭 변경, 실습실 공간 부족, 건물 누수 등의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과제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 검토 중'이라는 말로 모든 요청을 유보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가 소통간담회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닌, 형식적 종결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 진행 경과가 학생 사회에 공유돼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조차 진척 없이 되풀이하며, 결국 간담회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열리는 소통간담회에선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소모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다.

민원을 듣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소통의 완결은 아닐 것이다. 요구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소통은 무의미하다. 제도적 한계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실행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의 이유와 대안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다.

그렇지 못한 간담회는 '소통'이라는 이름을 빌린 일방적 통보의 자리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매 학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야만 하고, 그때마다 같은 답변만 들려오는 구조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절차만 반복될 뿐이다.

이제는 소통간담회 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민원 수렴 창구를 넘어,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굵직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명칭 변경, 실습 공간 확보, 노후시설 개선과 같은 문제는 사안별 로드맵을 설정해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비교적 단순한 민원 사항은 상시 건의와 즉각적 피드백 체계를 통해 빠르게 해결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지금이라도 소통간담회 존재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 간담회는 요식행위가 아닌, 대학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 형식적 반복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 중심 제도 보완 필요

안주하기보단 혁신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부터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기계공학과 등을 비롯한 일부 학과·학부가 열린 전공 유형2로 개편된다. 교육부 무전공 입학 인원 확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우리학교 역시 단과대 및 계열 단위에서 무전공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학은 이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진정한 교육 혁신의 일환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기존 교육 과정이 정부에서 말하는 열린전공 유형2와 다른 부분이 없다. 다만, 기존 교육 과정이 열린전공 유형2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 수혜에 걸맞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 과정 개선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일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전공을 맞닥뜨릴 한 전공 교수는 전공별 학생 유입의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학생들이 무전공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 과정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도 "최근 무전공 정원 확대 요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원금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전공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스스로 탐색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학생 중심의 방향으로 설계 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번 개편은 진정한 교육 혁신이자, 학생을 위한 무전공 제도, 열린전공 유형2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만평 교육부 방침 아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세시봉

반성과 쇄신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탄핵 대선'이었다.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의 여파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랐다. 그런데 대선 과정을 돌아볼 때 선택자인 유권자 입장에서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80%에 육박하는 투표율마저 무색했다.

유권자는 단순히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선택자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실질적 주체다. 유권자는 출마자의 이미지나 흥행 요소에 휘둘리기보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 국정 철학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혔기 때문이다. 정책토론은 실종됐고,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젠다의 부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주거, 불평등 해소 같은 중요한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집을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더욱이 대선 토론도 가관이었다.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에 보는 내가 부끄러웠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과거 행적이나 가족 문제가 아젠다를 대체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론은 부재했고, 유권자는 선택의 기준을 잃었다.

민주주의도 실종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전임 대통령 윤석열과 선거 끝까지 절연하지 못했다. 선거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보다 더욱 이슈를 몰고 간 주체는 윤석열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었다. 정당한 경선 과정을 거쳐 올라온 자당 후보를 하룻밤 사이 외부인으로 교체하려고도 했다.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의제가 실종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국 반쪽짜리 선거가 돼버렸다. 유권자에게 더 나은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상대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거나 정치의 목적을 국민이 아닌 다른 데 두어선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유권자 또한 감정이 아닌 합리적 이성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누가 더 못할지'가 아닌 '누가 더 잘할지'를 고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되고 싶다.